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인종학살 방지 명령
2~3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4, 5, 6면

신간 서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재난의 시대 21세기》
8~9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10~11면

이재명 테러 12면
김건희
명품백 수수 13면



미국은 중동 폭격 중단하라

폭탄과 미사일은 평화를 강제하지 못한다

관련 기사 4~5면

국제사법재판소, 인종학살 방지 명령

이스라엘에겐 정치적 타격, 팔레스타인을 위해 계속 모이자

찰리 김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을 그만 살해하라고 명령했다. 26일 금요일 재판부는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 행위를 막기 위해 “수종의 모든 수단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선동하는 것도 “예방·처벌해야”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적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에 군사 작전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종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번 결론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패배다.

또, 재판부는 이스라엘이 야만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 제기에 대해 이후 이스라엘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을 다루는 동안 긴급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남아공 정부의 요청에만 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넘쳐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십중팔구 수년이 걸릴 것이다.

책임

재판부가 휴전을 요구하지 않은 핵심 이유는 그 집행 책임이 유엔 안보리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과 십중팔구 영국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라는 촉구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인종 학살의 책임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서방의 후원자들로까지 번질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 일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들은 분개하고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수많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에게 그들이 옳다고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살육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정을 강제할 힘이 없다. 거리·일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키워야 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전쟁보다도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스스로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학살과 인종청소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알자지라의 하니 마흐무드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곳에는 실망과 분노가 많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이 기다린 것은 이 끔찍한 참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어지는 폭격으로 대부분 살던 곳을 떠나오고 무엇보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단 한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랍니다. 이들은 지치고 탈진했고, 집으로 돌아가 살아남은 가족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런 바람을 이뤄 주지 않았습니다.”

서안지구 라말라의 시의원 루브나 파

르하는 이렇게 말했다. “남아공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감사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은 즉각 휴전이었습니다.”

점령 상태인 서안지구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착자들의 공격을 “더 악화”시키고,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정착자들 사이에서 더 키울 것이라고 파르하는 말했다.

남아공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홉가지 긴급 조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중 6개를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소송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재판소 자신은 이를 강제할 힘이 없다.

투쟁의 핵심 전선은 거리와 일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더 키우는 것이다.

공정한 국제법이라는 신화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조업 중단, 파업, 도로 봉쇄, 대규모 행진, 점거를 핵심 수단으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을 명령했나

- “15대 2의 표결에 의해(반대는 이스라엘과 우간다)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의무에 따라 수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음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C) 그 집단의 전부나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생활 조건을 그 집단에게 강요하는 것, D) 그 집단 구성원의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
-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즉시 자국 군대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6대 1의 표결에 따라(반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는 수중에 있는 모든 수단으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인종 학살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예방·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6대 1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직면한 악조건을 해결하는 데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에 관한 혐의 제기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 파괴를 예방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서방은 계속해서 무기와 돈, 외교적 지지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단지 휴전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다. 살인과 강탈을 기초로 건국된 국가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 구실을 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

출처 Charlie Kimber, ‘ICJ court ruling is a blow to Israel, keep mobilising for Palestine’ (2024. 1. 26) / 번역 김중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은
이스라엘과 서방의 이데올로기적 패배다

지난해 10월 《뉴레프트 리뷰》에는 그 간행물의 가장 중요한 필자인 페리 앤더슨이 쓴 매우 시의적절한 글이 실렸다. 그 글은 국제법이 그것의 역사 내내 서방 제국주의의 도구였다고 비판했다.

앤더슨은 19세기의 법철학자 존 오스틴을 우호적으로 인용한다. 오스틴은 “모든 법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오스틴은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들의 법[국제법을 가리킴 — 역자]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들의 일반 여론이나 태도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그것은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반 여론으로 제정되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른다. 향후 그 법의 위반자에게 누가 그 법을 집행할지를 결코 명확히 할 수 없고 특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만든 법은 그 국가가 그 법을 집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국가들의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국제 정부는 없으므로 “국제법은 의견이며 … 오늘날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국제법은 패권국[미국 — 캘리니코스]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세계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힘으로서, 막강한 권력 유지 수단이다.”

그래서 앤더슨은 이렇게 꼬집는다. “체제를 지배하는 자유주의적 열강이 벌이는 전쟁은 국제법을 수호하는 이타적인 치안 활동이 되는 반면, 그 외의 세력이 벌이는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지난주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으레 서방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믿음직스러운 기구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인종 학살 혐의에 답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제한하고 그런 조치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이 결정에서도 오스틴과 앤더슨이 지적한 두 측면을 볼 수 있다. 즉, 누가 그것을 집행할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데올로기적 유용성을 유지하려고 남아공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판소는 이스라엘에 휴전을 명령해 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는 당연히 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이미 미국과 다른 주요 서방 강대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제히 그 국가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책략을 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그 기구의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가담했다는 이스라엘 측의 정보가 있다는 미심쩍은 근거를 대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지난주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의견” 수준에서 갖는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결정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제국주의가 겪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이데올로기적 패배다. 인종 학살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인 학자 라즈 세갈은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인종 학살 범죄라는 개념은 — 캘리니코스] 1948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며, 나치즘과 오늘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사건이 예외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했다. 이는 일정한 목적을 충족했다. 그 목적은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전 세계에 남긴 … 시체 더미와 문명의 폐허들에서 홀로코스트를 떼어 놓는 것이었다.

“인종 학살 개념은 국제법 체계에서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의 예외적 지위를 보호하는 구실을 해 왔다. … 이번 결정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인종 학살로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대학과 기업,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기관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하게 됐다. 이제부터는 그런 관계가 인종 학살에 대한 공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홀로코스트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존재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자행해 온 침략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정당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동맹자들의 오랜 노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군이 워낙 뻔뻔하게 가자지구에서 참극을 벌이고 이스라엘 장관들과 군인들이 워낙 노골적으로 인종 학살 의도를 드러낸 탓인 듯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빈국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국제법이 이데올로기로서 제구실을 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하는 법이다.

네타냐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극우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할 계획을 토론하는 지난 주말 행사에 참가해 자신들의 인종 학살 의도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오직 전 세계적 투쟁만이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투쟁은 지난주 헤이그에서 자 극제를 얻었다.

번역 이원웅



함께 참가합시다!



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일시: 2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중동에서 군사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김인식

1월 28일(이하 현지 시각) 요르단 내 미군 기지 ‘타워22’가 드론 공격을 당해 미군 3명이 죽고 34명이 다쳤다.

‘타워22’는 미국의 중동 지배를 위한 시설물로서, 시리아·이라크·요르단 3개국 국경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공격 발생 직후 ‘이라크 이슬람 저항’(친이란 민병대 조직들의 느슨한 연대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래 처음으로 미군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래 중동의 미군 기지들은 150차례 넘게 공격받았다.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공격들은 이미 “역내 전쟁”이 벌어져 왔음을 뜻한다(알자지라, 1월 28일 자).

바이든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친이란 반군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선택한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자신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는 “저항 단체들”이 이란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번 공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둘 다 현재로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란 공습 목표지가 이란 영토 내부일지 이란 영토 밖 대리 세력들의 근거지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물론 미국은 어쨌거나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하기보다 군사 공격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었다.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사진 출처: The National Guard (블라카)

미국은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 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2019년 시리아를 순찰 중인 미군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확전 가능성은 좀 낮다. 특히 이란과 미국이 직접 이 전쟁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나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사실상 역내로 확전 기로에 있다.”(YTN, 1월 22일 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헤르즈 할레비도 이렇게 말했다.

“언제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만 앞으로 수개월 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래 4개 아랍국들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들이 전투를 벌여 왔다.

또, 이란·이스라엘·요르단이 모두 이번 달에 시리아를 폭격했다. 게다가 이란은 파키스탄을 향해 예기치 못한 폭격을 가했다.

가장 위험하게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은 시리아·이라크·예멘을 공습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 확대는 진정한 확전이 벌어지는 걸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미국의 예멘 폭격은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을 지키려는 것

미국과 영국은 1월 11일 이래 2주 넘게 예멘을 폭격하고 있다. 미국은 홍해에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폭격을 합리화했다.

뻔뻔한 위선이다. 2019년 영국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란 유조선 그 레이스1을 억류했다. 시리아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이란 유조선이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 “항행의 자유”는 거론되지 않았다.

2010년 5월 29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해 밖 지중해에 있던 국제 구호 단체 ‘가자 독립 운동’(Free Gaza Movement)의 구호선단 마비 마르마라 호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19명의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이때도 “항행의 자유”는 제기되지 않았다.

후티가 “테러 단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인 2021년에 후티를 “테러 단체” 명단에서 뺐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예멘에서 벌인 전쟁을 후티가 견뎌 내며 예멘의 사실상의 정부가 되자, 미국은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동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제 와서 후티를 “테러 단체”로 재지정한 것은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를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티의 홍해 공격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예멘을 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예멘인들의 팔레스타인인 지지지는 아랍 정권들에 압력이 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사람들이 그럴진대 아랍 정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미국의 예멘 공격은 단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분출 위협에 전을 하는 아랍 정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네타냐후의 위기를 반영한다. 물론 전쟁은 즉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폭격과 인종 학살로 가자지구에서 2만 6400명이 죽고(7000여 명이 실종) 서안지구에서도 400여 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라는 면에서 승전을 선언할 수 없다.

이스라엘군이 1월 22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규모 주택 파괴 작전을 벌이다 이스라엘 군인 24명이 죽었다. 메르카바 전차도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지역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가자지구 북부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군사 능력과 통치 역량을 재건하는 초기 국면에 있는 듯하다”고 관측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느 점령군과 마찬

가지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전사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마스 “점멸”이라는 목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또, 군사 작전을 통한 이스라엘인 인질 구출 목표도 이룰 수 없다.

▶ 5면으로 이어짐



서평 |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전락해 버린 팔레스타인의 비극

작년 10월 22일에 끝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수상이 예정된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 아다니아 쉬블리의 소설 《사소한 일》의 시상식이 취소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주최 측이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하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시상식 참여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 올가 토카르추크 등 세계적 문학가들이 도서전에 항의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한 김남일 작가 등 문인 175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 터무니없는 사건은 문학계에도 존재하는 팔레스타인인 차별을 보여준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었기에, 전례도 없는 시상식 취소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소한 일》은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일) 이후 이스라엘의 폭력이 ‘사소한 일’로 전락해 버린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다룬다.

1부는 나크바 이듬해의 얘기로, 이스라엘 점령군의 한 소대로 시선이 향한다. 특히 걸로 규율도 잡고, 윤리적인 척하는 소대장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이 소대는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아랍인 수색 및 제거 작전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한 아랍인 소녀를 발견하자, 소대장은 처음에는 물로 씻기며 소녀를 보호할 것처럼 말한다. 소녀를 건드리려 하는 병사들에게 그러면 총으로 쏘 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소녀를 먼저 강간한다. 이후 병사들의 집단 강간도 방치하며, 문제를 덮기 위해 소녀를 살해한 다음 사막에 암매장하는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 그날은 1949년 8월 13일이었다.

2부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25년 뒤에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식인



팔레스타인의 슬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학살로 사망한 사람들 장례를 치르고 있다

여성의 시선에서 소설이 전개된다.

그녀는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의 생일에 벌어진 끔찍한 일을 알게 되지만, “지속적인 살해가 지배적인 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딱히 특별한 게 없었던 탓”이라고 말하며 그 일을 사소한 사건으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일에 벌어졌다는 찝찝함에 진실을 찾으려 자신의 신분증으로 갈 수 없는 이스라엘 점령지로 간다. 이후 점령지에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며, 끝나지 않는 팔레스타인인 억압을 실감한다.

비극

《사소한 일》은 팔레스타인의 비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여러 장치를 통해 독자의 가슴을 울리도록 기억

해 낸다.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창조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발터 벤야민이 말하는 소설의 임무를 충실히 구현한 명작이다.

이 소설의 독특한 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보통 장편소설과 달리 팔레스타인이라는 배경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사소한 일’로 이어지는 구조다.

2부의 주인공 ‘나’는 자신과 맞닿아 있는 ‘사소한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위협을 받고, 차별에 시달린다. 이 장면에서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님을, 소설 속 반세기 이후에도 강제 점령이라는 큰 틀이 변함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현재진행형임을 상기시킨다.

소설 속 사건과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 역시 인상 깊다. 소설을 읽고 있으면, 사막 한복판 모래가 흩날리는 곳,



사소한 일

아다니아 쉬블리 지음, 전송희 옮김, 강, 172쪽, 15,000원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팔레스타인과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세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특수한 반영인 소설이 때로는 사진이 실린 기사나 영상으로 된 뉴스보다도 독자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찔러 온다.

이 소설의 역설적인 제목 ‘사소한 일’도 독자에게 여러 질문을 던진다. 표면적 의미는 서방 제국주의와 종전 이스라엘이 차마 말로 표현하기 끔찍한 팔레스타인의 학살을 사소한 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팔레스타인의 일상적 비극인 ‘사소한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독자는 사소한 일을 단지 관조할 것인가, 아니면 사소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과 마주치게 된다.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한 독자라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닌 잔혹한 비인간적인 범죄로 규정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려면 강탈국가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적극 연대해야 할 것이다.

김민규

▶ 4면에서 이어짐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 구출에 가까이다 가섰다고 인질 가족 대표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갈란트의 말은 인질 가족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1월 22일 인질 가족들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재무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교전 중지

와 인질 석방 협상을 촉구했다.

또한 텔아비브 시민 수천 명이 인질 귀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물론 이 항의들은 가자 인종 학살 중단이나 심지어 휴전 같은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분쇄할 수 없고, 인질의 안전한 귀환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반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네타냐후 정부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휴전을 카타르·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제안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인질 교환을 통해 국내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일시 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은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는 미국이 제안한 “두 국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은 그 강한 군사력으로도 가자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이먼 바스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들조차 이를 시인하기 시작했다. 침공 전에 수립된 이스라엘의 전투 계획과 견주 보면 현재 이스라엘군이 차지한 땅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이스라엘을 충실하게 비호하는 언론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서 진척이 더디자, 이스라엘군 수뇌부 안에서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여전히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인 인질을 구출한다는 핵심 전쟁 목표를 단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렵겠다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그런 이스라엘군 지도자들은 “하마스의 기반 시설이 정보 장교들의 애초 예상보다 훨씬 정교해서 우리 측 공격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아직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 100여 명의 신병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그들은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몇 달에 걸친 이스라엘군의 융단 폭격과 지상 공격에도 팔레스타인인 저항 세력은 지휘·통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에 계속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미사일을 멈추지도, 하마스를 제거하지도 못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직 하마스를 꺾지는 못했지만, 하마스 전사 수천 명을 “제거”했다며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전 이면의 추세는 사뭇 다르다. 이를 시사하는 지표 하나는 도시 게릴라를 상대하려면 전선에 장교들을 투입해 건물 하나하나를 맡게 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대령

하마스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군 장교 상당수를 살해했고, 그중 최소 넷은 대령이었다. 전쟁은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만, 숫자는 중요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사 6500~80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다. 모든 사상자 수치는 어느 정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자신이 발표한 수치를 뒤집는 일을 때일같이 한다.

어쨌든 이스라엘군의 수치 대로라면 이스라엘군 전사자 대 하마스 전사자의 비율이 약 1 대 16일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군 전사자 대 민간인 사망자의 비율은 훨씬 높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전사자 비율도 이와 비슷했다. 미군 전사자 한 명당 16명의 북베트남 군인이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투사가 전사했다.

그때도 미군 전사자 대 민간인 사망자의 비율은 훨씬 높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스라엘군 최장수 부대이자 전공을 가장 많이 세운 부대인 골라니 여단(제

이스라엘 내 불만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여론 조사

텔아비브대학교가 최근 시행한 ‘평화 지수’ 여론 조사 결과는 이스라엘인들의 견해가 약간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쟁 목표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51퍼센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을 되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11월 조사 때의 33퍼센트보다 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 43퍼센트는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분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달 전 조사 때의 59퍼센트보다 줄어 들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군의 군사력 사용 수준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퍼센트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37퍼센트는 가자지구에서 군사력을 “너무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여단)은 부대원 72명이 전사한 후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철수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력, 사기, 심지어는 인종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자신의 호언장담과 달리 하마스를 분쇄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의지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성장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승리하려면 바로 그 저항이 심화·확산해야 한다.

네타냐후가 필요로 하는 전쟁, 팔레스타인인들만이 멈출 수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절대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더는 네타냐후를 믿지 않는다. 포로 가족들 몇몇이 주도하는 휴전 촉구 시위가 성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주 네타냐후의 집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한 단체는 네타냐후 집 앞을 지나는 길가에 붉은 액체를 쏟고 “네타냐후의 손에 인질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규탄

했다.

이스라엘 국가 내 일부는 포로 교환을 대가로 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팔레스타인들을 말살할 때까지 하마스에 맞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네타냐후의 최대 관심사는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자신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것임을 알고 있다.

동시에 네타냐후는 업적을 남기고도 싶어한다. 이스라엘 국가의 심장부에

서 인종 분리 체제를 심화시키는 것도 그가 남기고자 하는 업적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7일 이전까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는 불법 정착자 70만 명이 있었다.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강탈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붙었다.

이스라엘 내에서 네타냐후 반대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팔레스타인인들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는 식민정착자의 관점에 갇혀 있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살던 곳에서 쫓아내는 것은 관찮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스라엘인들의 목숨을 너무 많이 잃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스라엘 내의 반대 때문에 네타냐후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저지하려면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③

오늘로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늘로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군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유대인 혐오, 시온주의 반대, 좌파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비밀 회담 결과 1993년 공식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오늘로 협정에 조인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환호하거나, 적어도 안도했다. 오랜 투쟁과 희생 끝에 마침내 독립국 수립을 향한 실질적 진전이 있는 듯 보여서였다. 이스라엘 당국이 금지했던 팔레스타인 깃발이 가자지구·서안지구 거리를 수놓았다.

곧 팔레스타인 경찰을 비롯한 정부 기구들이 세워졌고, 수십 년간 망명지에서 운동을 이끌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부가 귀국했다.

그러나 오늘로 협정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다. 1993년에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아비술라임은 협정 체결 20년 후 이스라엘 리쿠드당 지도부의 주도면밀한 “불성실”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찬사가 자자하던 ‘평화 프로세스’는 속빈 강정이 됐다. 사실 속빈 강정만도 못했다. ‘평화 프로세스’는 서안지구에서 불법적·공격적 식민 프로젝트를 방해받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 이스라엘 이바라마지않던 위장막이 돼 줬다.”

“항복 문서”

팔레스타인인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이 더 정곡을 찔렀다. 사이드는 오늘로 협정이 “팔레스타인의 항복 문서”라고 꼬집으며, PLO 지도자들이 대중 투쟁 ‘인티파다’로 얻은 기회를 허비해 버리고서는 이 협정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늘로 협정의 조문은 이것이 엄청나게 세력 차가 나는 양측 간에 맺어진 협정이었음을 뚜렷이 보여 줬다. PLO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오늘로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항복 문서”이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시행과 긴밀히 결부됐다

(PA)가 된 PLO를 “인정”해 줬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로 확장된 군기지-정착촌-“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영토의 국경선과 그 국경선 안의 땅 대부분을 계속 통제했다.

오늘로 협정으로 점령지의 경제가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게 개조됐다. 서안·가자지구를 이스라엘 경제로 편입시키는 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구들이 적극 협조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그런 메커니즘 중에는, 팔레스타인인 노동력을 “쓰고 버리는 노동예비군”,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틀거나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산하 팔레스타인연구소를 창립한 아담 하니에의 표현)로 바꿔 놓은 것도 포함된다.

오늘로 협정 이전에는 서안·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중 3분의 1이 이스라엘에서 일했다. 1996년이 되면 이 비율은 15퍼센트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팔레스타인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감소했다.

경제학자 사라 로이는 팔레스타인이 “개발”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독자적인 제조업·농업을 파괴하려고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설명했다.

1990년대 동안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국경이 줄줄이 폐쇄돼, 팔레스타인산 재화가 국내의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혔다.

2008~2009년과 2014년에 가자지구를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군은 잿소와 낙타의 머리를 쏘 죽였고, 올리브나무를 뽑아 버렸으며, 식료품 공장에 로켓포를 쏘 파괴했다.

알아와다 공장을 운영하던 무함마드 알텔바니는 2014년 8월 <가디언>에 이렇게 전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쟁입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45년 만에 이 공장을 세웠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파야드주의”

이스라엘의 경제 전략의 마지막 요소는 전직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살람 파야드가 점령지에서 한 일과 관련이 있다. 2007년 하마스의 통합 정부에 맞서 가자지구에서 미국의 후원하에 벌어진 쿠데타 이후, 파야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재무장관과 총리를 지냈다.

“파야드주의”는 소비자 지출 증대 및 개인 부채 급증을 동력 삼은 경제 호황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빈곤과 불평등을 전혀 완화하지 못했다. 2011년이 되면 일부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인 가구 절반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팔레스타인인 활동가·저술가 알리아부니마는 평화 프로세스로 어떻게 신진 팔레스타인인 엘리트층이 부상했는지,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점령과의 공생 관계” 덕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했을 때,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 자본가들을 측근으로 데려왔다. 그중 다수는 걸프 연안 아랍 국가들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금세 팔레스타인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예컨대 신경제의 성공 사례로 널리 회자된 서안지구 신도시 라와비는 사실 C구역 이스라엘 정착촌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팔레스타인 자치정

부는 라와비 건설 과정에서 마을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농부들을 쫓아냈고, 이스라엘에서 건설 자재를 들여왔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함께 공단을 만들고, 규제 없이 쓸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 노동력을 미끼 삼아 걸프 연안국들을 비롯한 타국에 투자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저가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국가 내에 공장을 만들어, 거기서 만든 상품을 나머지 아랍 세계로 수출했다.” 아랍 시장에 쉽게 접근하려고 여기서 제조한 상품들에는 ‘메이드인 팔레스타인’ 표지가 붙었다.

오늘로 협정은, — 아라파트 휘하의 — 팔레스타인인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내 지배적 제국주의 강대국인 미국과 그 충실한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요구에 굴종하기로 결정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때 아라파트는, 아랍 국가들 중 최초로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를 전범 삼은 것이었다.

이집트에서처럼 팔레스타인에서도 군사적·외교적 타협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시행과 긴밀히 결부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극소수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기구가 됐다.

세계 다른 곳의 패턴을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시 미국이 만든 엄청난 비대한 보안 기구들로 특권층을 비호했고, 아라파트의 고분고분한 후계자 마흐무드 압바스와 그 일파를 지키는 데에 주력했다.

이 정부는 점차 억압을 강화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보안군은 이스라엘군과 종종 한 몸처럼 행동했으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전략적 바람을 현실로 만들었다.

팔레스타인판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계급 문제라는 것은, PLO 부상 이후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분명하다.

PLO가 부상하던 당시 걸프 연안의 팔레스타인인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난민촌의 팔레스타인인 청년들을 동원해 운동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그 운동을 통제하려 애썼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서안지구의 자본가들은 금융·교역·언론을 통해 다국적 자본과 훨씬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에 맞서 이스라엘과 대놓고 협력을 지속한다.

계속되는 기후 재난은 화석연료와 자본 축적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거듭 드러냈다



사진 출처 Mike Lewelling/ National Park Service



서평 | 《재난의 시대 21세기》(알렉스 캘리니코스)

위기를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간은 자본주의의 재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혁명적 변화의 절실함을 역설한다고 앤 알렉산더는 평한다. 캘리니코스는 한국 EBS <위대한 수업>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편에 출연해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재앙과 재난을 다루는 뉴스는 그저 정상적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융 위기, 기상 이변, 팬데믹, 전쟁, 소요가 주마등처럼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중요한 신간은 이런 상황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그야말로 인간 사회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차 없는 내적 논리가 인간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제와 대결하려면, 우리가 처한 곤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설득력 있게 혁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전체까지

는 아니더라도) 일부 요소들을 파악한 여러 사상가들을 활용한다.

“재난의 시대 21세기”의 표면적 특징은 흔히 양극화 징후로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진영과, 신흥 강대국 중국이 있는 진영 사이의 긴장 고조다. 캘리니코스가 지적하듯이 이 균열은 오늘날 세계 정치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중국 지배계급의 야망을 꺾는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중국 지배계급과의 대결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양극화

하지만 세계 정치의 더 중요한 균열은 되살아난 극우와, 그보다는 미약한 왼쪽으로의 급진화 추세 사이의 양극화다.

지난 몇 년 동안 [극]우파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증대했다. 캘리니코스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분노가 누적된 결과이고,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경

제적 고통과 혼란이 그 분노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유럽에서 이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극우파 활동가들과 연합해서 체제의 실패에 대한 분노를 난민들에게 돌리는 인종차별 공세로 표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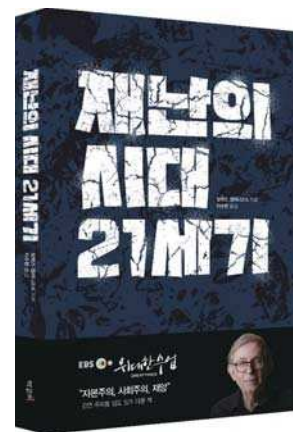
그런 전략은 “드러내는 동시에 억누른다”고 캘리니코스는 묘사한다. 즉,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불만을 포착해서, 그들을 고통에 빠뜨린 진짜 장본인들(사회의 최고 부자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분노를 터뜨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경제·정치·이데올로기 위기의 압력이 결합돼 안에서부터 썩고 있다.

이 부패 과정이 너무나 진척된 나머지, 이제 우리는 미국이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약한 고리”가 됐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캘리니코스는 강조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군사력과 금융 역량 면에서 미국 다음가는 국가들을 큰 격차로 앞서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약한 고리”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캠페인들의



재난의 시대 21세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책갈피, 416쪽, 22,000원

잡다한 무리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트럼프의 부추김을 받아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은 미국 내의 폭발적 긴장이 공공연히 분출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였다. 캘리니코스가 지적하듯이, 트럼프의 제멋대로인 행동은 주요 미국 지배계급 인사들과 미군 수뇌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미군 수뇌부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쿠데타를 성공시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내팽개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사진 출처: Tyler Meibler (플리커)

트럼프의 부상은 여러 위기의 압력이 결합돼 미국이 내부에서부터 썩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움짤한 바로 그 최고 경영자들과 군 장성들이 관장하는 정치·경제 체제가 애초에 트럼프의 집권을 낳았다.

이런 과정은 공화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극우파는 공화당 안으로 파고들어 가서 동지를 틀었고,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도력을 확립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그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이 대선 결과와 평화적 정권 이양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지했다.

폭주하는 기차

세계 경제 체제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이 부패하고 있다면, 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 특히 중국은 어떤가?

캘리니코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논파한다. 미국 경제의 근저에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중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다. 사회의 붕괴를 향해 계속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벼랑 끝으로 폭주하는 기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당길 것인가”

하는 선택이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파멸로 돌진하는 체제에 맞선 반란과 혁명뿐이라고 주장한다.

주류 평론가들이 “다중 위기”라고 즐겨 부르는 것의 뿌리는 자본주의의 내적 논리에 있다. 이 “다중 위기”는 섬뜩한 회전목마처럼 돌고 있는 종말론적 사건과 과정들, 예컨대 전염병, 홍수, 산불, 기근, 경제 위기, 전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두 측면이 상호작용하면서, 인류와 (지구를 인류와 공유하는) 수많은 다른 생물 종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

첫째 측면은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두 적대 관계, 즉 임금노동 대 자본의 적대 관계와, 경쟁하는 개별 자본들 사이의 적대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둘째 측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과 너무 오랫동안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첫째 측면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자본 축적 과정이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추동된다는 것이다.

캘리니코스가 강조하듯이, 자본주의

우리가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반란과 혁명의 시대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발전시킨 자기 조직의 형태로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체제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압력을 자본에 가한다. 이런 압력은 기업주들로 하여금 자신이 “노동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 광범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끼칠지도 모르는 피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지배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일으킨 전 지구적 위기를 멈출 수 없다.

전 세계 지배계급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위험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논리가 그들을 재난으로 떠민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적응”하려는 미온적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

희망

이런 때에 미래를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캘리니코스의 책에는 냉철한 분석과 통렬한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필수적 원천도 있다. 캘리니코스는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전장으로 젠더나 인종에 따른 차별에 맞서는 운동들을 지목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은 차별의 구체

적 형태들이 심층적인 역사적 과정에 의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 뿌리박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 구조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젠더 관계를 보자.

이런 “가족 구조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 그러면서 그 가족 구조는 젠더에 따라 분열된, 그리고 그 구조가 낳은 다양한 차별에 따라 분열된 노동력을 자본주의에 공급한다.”

인종차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종차별이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범죄, 특히 서구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 아프리카인들을 대거 노예로 만든 과정의 해악적 유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종차별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이라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도덕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실천적 필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 노동계급의 집단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런 주체성을 다시 형성하려면, 이후 붕괴의 시대에 “비상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단지 파업과 항의 시위, 시민 불복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장악과 혁명을 뜻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를 모두 죽이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체제”를 멈추고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혁명뿐이다. 그런 혁명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반란과 혁명의 시대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발전시킨 자기 조직의 형태로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출처 Anne Alexander, 'New Age of Catastrophe—Mapping out the crisis' (2023, 4, 08)

번역 이수현(《재난의 시대 21세기》번역자)



사진 출처: 기아 스트림

기후 위기와 온갖 차별에 맞서려면 노동계급의 집단적 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헌법 전문)이라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왔던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2대를 이어 온 이데올로기를 이번에 손자인 김정은이 폐기해 버렸다.

사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해 왔다. 남·북한 지배자들은 해방 직후 38선 남북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각자 자신의 국가를 창건했고, 자본 축적의 독자적인 중심을 형성해 왔다. 특히, 국제 정치 무대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 국가로 행동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과 북한 관료들은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스탈린주의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변형해 북한에서 독자적인 국가자본주의 발전에 매진했다. 그들도 세계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북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제일 중시했던 것이다.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 북한 당국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염려했고, 그래서 상당 기간 남·북한 두 국가가 ‘평화 공존’하는 쪽으로 기존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변경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김정은의 행보는 아버지 대에 견줘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남한이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고 ‘두 개의 코리아’를 공식화하니 말이다. 더구나 이제 남한은 여차하면 핵공격까지 불사해 점령해야 할 적대국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대남 정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북한 내부 단속의 필요로 설명한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가볍게 물리치고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해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과 그의 관료에게는 무력 과시를 통해 내부적으로 체제의 결속을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러시아와의 밀착은 김정은이 과감하게 전환에 나선 중요한 배경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은 변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질서와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이번 결정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현 국제 정세의 기본 특징”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냉전 종식 후, 30년 가까이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써 왔다. 특히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한편, 그 핵개발 카드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동적으로 변해 가는 국제 질서가 가장 문제였다. 아시아·태평양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 김정은은

2018~2019년 트럼프와 친서 27통을 주고받으며 북·미 협상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하에서도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일방적 양보만 요구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상회담을 이용할 뿐이었다.

2019년 8월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마지막 친서에 이렇게 썼다. “각하께서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바보로 보이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바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쓸 만큼 당시 김정은의 불만과 좌절감

은 컸던 듯하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올 연말에 재선돼 다시 만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18~2019년 경험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고차 방정식인지도 실감했을 것이다.

“한 참호에”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국가들 간 갈등과 분열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도 그 불안정의 한가운데에 있다.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서다.



올해 열린 한미일 연합 훈련. 동·서 제국주의간 경쟁이 한반도 정세를 바꾸고 있다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재판에서도 주호민 씨의 녹음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자폐 아동의 경우 제대로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내용에는 A 교사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한 말, 곧 “진짜 밍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이 들어 있었다.

이 내용을 들은 학부모들, 특히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큰 상처 주는 말을 했으니 말이다.

자폐성 자녀를 둔 한 부모는 “[문제적 발언을 한] 5분의 시간보다 2시간 30분의 침묵에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담당 판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이런 표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한편, 많은 교사들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으로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A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몇 마디 화풀이성 발언을 한 걸로 법적 처벌까지 하려는 것에 대한 항변이다.

특히, 아무런 대책 없이 장애 아동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특수교사 개인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고 지적한다.

초등교사노조는 A 교사에 대한 선처와 주호민 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 운동

을 하고 있다. 오늘(1월 30일)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아들과 A 교사의 분리만을 원했다. 그러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주호민 씨나 교사 개인의 잘못 문제로 취급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피해자

한 학부모는 “부모나 교사, 특히 아이들은 모두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데도 열악한 교육 환경이 이런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은 일인당 너무 많은 장애 아동을 가르쳐야 한다.(게다가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수교사를 도울 보조 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요원의 도움을 흔히 받는다.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가르친다는 통합교육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배움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낸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교사들이 통합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과중한 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수교사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지원하는 대책도 거의 없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충분히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는 특수교사 임용을 조금 늘리는 등 정부·교육청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오히려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특수교사가 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원을 늘려 특수교육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동훈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고 남한에서는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가 모두 군비 증강에 열을 올려 왔다. 윤석열은 미국 쪽에 확고히 기우는 선택을 하고, 대북 적대도 강화하며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북한도 제국주의적 갈등 심화로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자국이 숨 쉴 틈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등 몇몇 국제적 사건들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비록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지금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지역적 도전들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 경쟁자인 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좀 더 커졌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왔다. 중국과는 교역이 증대하며 경제적 관계가 발전하고 있고, 외교적 관계도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견줘 훨씬 밀접해졌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이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동아시아에 다시 관여하고자 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가 더욱 밀착한 계기가 된 듯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인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국제 관계가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 세계로부터 다극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일극 세계”의 종언과 “다극 세계”의 도래를 강조했던 그해 6월 푸틴의 연설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응원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지난해 1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 담화문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진전되면서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미·중 군비 경쟁,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확충 등 주변 질서의 변화와 압박에 핵과 미사일 강화로 대응해 왔다. 아마 북한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핵무장 강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을 듯하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유사시 남한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제국주의 문제

이처럼 제국주의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가운데, 한반도의 두 국가는 서로를 향한 적의를 키우면서, 각자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한편에서 길을 선택해 왔다.

이런 맥락 속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확립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전환을 수년 전부터 검토하고 가다듬어 온 게 분명하다. 2019년 이후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의 슬로건 변경, 지난해부터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일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북한 국가의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은 “반제공동투쟁”이나 (남한의 미·일과의 밀착이 그렇듯이)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다.

북한 당국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동·서 제국주의간 갈등의 맥락 속에 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언급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지 못하면서, 남한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국주의간 갈등과 남북한 긴장 속에서 북한 비판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 것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파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자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될 뿐이다.

남한의 좌파들은 중국·러시아 제국주의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자국 정부를 반대하는 데 훨씬 주력해야 한다. 그러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의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김영익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문성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자신들이 범행 영상 분석, 각종 정밀 감정, 계좌 추적, 통화 내역, 통합심리분석, 거짓말 탐지기 등을 실시하고 114명이나 되는 관련 인

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중대범죄로, 자신들이 직접 재판까지 맡아 중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살인미수죄뿐 아니라 후보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담은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도 기소했다.

이번 테러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방해라고 규정한 것은 검찰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익적 위협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불가피하게 일부 인정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건이 우익 테러라는 점을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관들과 우파 언론은 지금 사건 은폐로 우익을 보호하고 있다

우익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지난 수년간 여권과 우파 언론, 거리 우익들 모두 이재명에 대한 증오 선동을 지독하게 해 왔다. 현 정부의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1년 넘게 이재명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망신을 주고 구속하려 해 왔다.

한동훈은 죽을 뻔했다는 이재명의 복귀 발언을 “망상”으로 치부했는데, 그 자신은 이재명 테러 직후 수백 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지방 순회를 다녔다. 이것말고도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재명 경멸 발언은 끝이 없다.

이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파의 증오를 사는 것은 이재명이 개혁 열

원 대중에게 ‘좌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가 사건 직후 가장 먼저 지적했듯이, 이번 이재명 살인미수는 이재명에게 투영된 개혁 열원에 대한 우파의 증오와 두려움이 테러 폭력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수천만 명의 투표로 결정돼야 할 국가 권력 문제를 우익 개인들이 결정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민주당 대 국힘의 문제만도, 이재명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껏해야

의원 몇 명의 경찰청 방문과 국회 질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나가는 선거 국면에서 괜히 반우파를 강조했다가 중도층 표심을 잃을까 봐 소심한 것이다.

이는 눈앞의 (민주당에 이로운) 선거 결과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의 발로다.

좌파에 대한 증오 선동

지금 우파는 2년 전 윤석열 당선으로 사기가 올랐다가 윤석열이 경제·안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위기에 빠지자 극도로 신경질적인 상태가 됐다. 이번 테러는 이런 히스테리

가 극렬 우익분자들에게 전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복합 위기의 심화와 정치 양극화 속에서 우익의 폭력성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들과 우파 언론은 지금 사건 은폐로 우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반동성에 맞서 싸우려면 중도층 눈치보기로는 안 된다.

우익 테러 범죄에 대한 항의를 대차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쟁취하려는 대중 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져야 한다.

의혹을 해소 못한 부산지검 수사 결과

이번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가 남긴 의문이나 의혹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않고) 있다.

● 정치 테러이므로 당연히 범인의 정치적 배경과 배후 문제가 충분히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김진성이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산 데다가 최근 사업 부진,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이 왜,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 이재명에 대한 증오를 발

전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경찰의 설명은 범행 준비 돌입 시점의 정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팀은 김진성이 2023년 초부터 이재명 암살을 본격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 시점은 윤석열이 화물연대 파업을 패배시켜 우파 결집을 이루며 지지율 추락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이재명은 대장동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누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김진성은 여러 칼로 실험해 보고는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구입해 장기간 갈고 개조했다. 책, 나무판자, 목도리 등을 표적 삼아 찌르는 자세까지 치밀하게 연습했다. 그렇게 준비한 암살의 1차 시도 장소는 2023년 6월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였다.

이를 볼 때, 총선 문제는 암살 계획 수립의 동기를 거의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의문들 때문에 김진성의 당적이나 가입한 단체 등 구체적인 정치 활동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낚낚이 수사는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을 테러한 중학생 범인이 이재명 지지 집회에 나갔는지를 공개 수사하는 것과 너무 대조된다.

● 공범 관련 수사도 여전히 부실하다. 검찰에 따르면, 암살 테러 방조범 B씨는 범인 김진성과 같은 지역에 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자다. 김진성이 공인중개사를 운영했으니 평소 사업상 긴밀한 관계였을 뿐 아니라 암살 계획을 알고도 도왔으니 틀림없이 정치 성향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둘을 왜 공범으로 보지 않는지에 대한 납득할 설명 없이 검찰은 단독 범행으로 단정했다.

▶ 13면으로 이어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됐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윤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에 비교했다. 그러나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이미 다 해결된 거라며 김건희 방탄사수대로 자세를 바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성역 없는 진실을 외쳐 유명세를 얻은 옛 운동권 출신 인사가 국회 공천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하는 모습이 꼴사납다.

한동훈이 영입한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김건희의 사과 운운하다가 말을 바꿔 그를 몰가 피해자로 규정하며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일들로 김건희가 여권의 성역임이 다시금 확인됐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덮기에 대한 진정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분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이다.

수뢰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건을 두고 몰가 공작의 피해(이수정)라고 하는 것은 지엽말단으로 본질을 가리는 것이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김건희와 선을 대어 접촉했다. 대북 사업을 하던 최 목사는 윤석열의 대북 정책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김건희와 만났다.

둘 다 부계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었는데, 김건희의 아버지와 최 목사의 집안 어른은 모두 양평군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그런 인연 때문에 쉽게 지인 관계가



특검 거부, 여권의 갈등 봉합 등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배를 탄 운명임을 보여 준다

된 듯하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최 목사는 대북 사업에서의 도움을 바라고 김건희를 지속적으로 만나 왔고, 그가 전달한 선물은 이번에 문제가 된 디올 백만이 아니다. 그는 샤넬 향수와 화장품, 자신의 대북 사업 관련 책도 선물했다고 한다.

둘의 만남과 선물 전달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성립된 지속적인 상호 거래(를 위한) 관계였지, 일회성 몰가 공작 만남이 아니었다.

영상에서 김건희가 백을 받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최 목사가 제공한 선물(들)은 김건희를 통해 자신의 대북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대가성 뇌물 제공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최 목사의 몰가는 합정 몰가가 아니라 자신의 보험용 몰가였을 수도 있다.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최 목사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이다.

대가성이 불분명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단지 실정법의 논리일 뿐이다. 정치적·도덕적으로는 분명히 권력형 부패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해선 파헤쳐야 할 의혹이 더 늘었다.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것,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더해져 이제 김건희 관련 의혹은 혐의 은폐(에 관한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바뀌었다.

윤석열과 여권은 주가 조작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벌인 정적 겨냥 수사였고 그럼에도 기소를 못한 건이라고 하지만, 그 수사 시점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위세가 등등할 때였다. 즉,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권력자일 때 벌어진 수사였다.

게다가 해당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모

녀가 약 23억 원을 차익으로 챙겼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 때였다.(그 검사는 옷을 벗었다.)

지난 연말 <뉴스타파>는 그 주가 조작 시점에서 김건희가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전화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1심에서 관련자 모두 유죄를 받았고, 유죄 판정 거래의 절반 이상에 김건희 모녀의 통장이 사용됐다. 그 결과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사실이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은 이처럼 너무 정당한 요구다.

이재명, 이선균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유죄 추정하며 “수사에 응해서 억울함을 해명하라”더니, 김건희에게는 이중잣대인 것이다. 그 이중잣대 자체가 부패인 것이다.

김건희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정의당 등 야당이 지명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여당이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 여당은 또한 민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할 것 아닌가.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원내교섭단체인 야당들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물 중 박근혜가 선택하도록 했었다. 당시 박근혜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대신 당시 제3당이던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를 선택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위에 언급된 것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도 꽤 심각한 의혹인데, 이것도 여당과 변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원희룡 당시 장관)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김문성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팔레스타인의 친구가 아니다

★ 이스라엘 노동계급의 역할은 무엇일까?

★ [긴 글] 이스라엘 좌파는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혁명가 갓산 카나파니의 소설들 소개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 프랑스 농민 투쟁은 좌와 우, 어디로 향할 것인가?

▶ 12면에서 이어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난데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헬기 이용 건으로 고발한 것에도 의혹이 든다. 고발을 주도한 이 단체 회장 임현택은 극렬한 우익 행보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의 개인 병원이 있었던 곳은 김진성과 같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이었다. 이런 ‘우연’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 봐야 하

지 않을까?

● 사건 당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출처였던 “1cm 열상 경상”이라는 거짓 정보가 어떤 경위로 언론에 유포됐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대테러센터장은 해당 문자가 육안 판단 현장 보고를 받은 것이었을 뿐이고,

자신들은 그 문자를 유포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뒤늦게 발견된 피범벅 와이셔츠만 봐도 “출혈 적은 경상”이라는 현장 육안 판단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 검찰 수사 결과는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인 중형 구형을 통해 이 활동가들에게 반드시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보냈다.

1월 12일 검찰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같은 혐의(‘범죄집단’)를 적용한 바 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서 활동한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의 법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상의 ‘범죄단체’나 ‘범죄



공개적·대중적 방식의 F-35 반대 활동에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집단’은 기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에 비해 입증 조건이 덜 까다롭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체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청주 활동가 3인의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는 검찰의 형법 114조 적용이 징역 20년이나 구형한 데에서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간첩(4조 ‘목적수행’) 등 각종 혐의를 묶어 최대 구형량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입증 조건보다 덜 까다로우면서도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단체 조직이 인정되면 당사자들에 대한 중형뿐 아니라 간첩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단체를 적발한 것이 돼, 유죄 선고의 정치적 충격 효과를 한껏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런 여론 조작용 전시효과일 것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청주 활동가들에게 ‘범죄단체’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 114조 적용은] 원래 ‘텔레그램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려고 검찰이 개발한 논리였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를 피해자가 없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만 아니면 청주 활동가들의 활동은 일반 시민단체 활동과 다를 바 없다.”

청주 활동가들이 한 일은 대체로 북한 밤나무 보내기 운동, F-35 전투기 청주 배치 반대 등 평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명과 모금 같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런 활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행위로 뒤집어씌웠다. 전형적인 마녀재판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도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적발했다며 여러 활동가를 검거했다. 이런 충격으로 대중에게 도덕적 공황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주 활동가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하고 있다.

2월 16일에 3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듯하다. 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김영익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① 노동자 연대 ② @wspaper ③ wspaper_org ④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① “노동자 연대” 검색 ②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5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제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장,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59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도 폐지 위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교권 보호 대책 아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에서도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부 교사 사이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런 상황을 악용해, 국힘 도의원들이 폐지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역의 기독교 우익 등이 주민 청구 형식으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여권과 보수주의자들이 “교권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사들의 안전과 권리를 염려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허울 좋은 말잔치였음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본지 483호 ‘사이초 무협’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그들은 교권 보호를 핑계삼아 황당하게도 학생 통제와 경쟁 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자사고·외국어로·국제고 존치를 결정했다. 경쟁 교육이야말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인데 말이다.

정부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교사 인력 감축에 나서며 교사들의 조건도 공격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용인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교직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관계다

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지만,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에 역행하는 공격에 이용된 셈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폐지에 반대했다.

후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오남용했을지라도,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후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했다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흉인 양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권 침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2017~2021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교사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에서 교권 침해 건수가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

인권 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구정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2014)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관계임을 보여 준다.

물론 많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우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해 교권 보호 방안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투쟁한 대다수 교사들은 학생들을 억압할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비판적이었다.

교권 침해는 단지 몇몇 막무가내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개개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사회와 교육 구조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 (관련 기사: 본지 470호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로 인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 입시 경쟁 강화와 교육 불평등 악화, 그에 따른 학생의 소외 심화와 학부모의 불안감 증대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교권 추락의 근저에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것은 여전히 학생이다. 가혹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나날이 좌절을 경험한다. 학생들의 극심한 소외는 때로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처럼 잘못된 교육 구조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교권 침해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입시 경쟁과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학교 서열화도 없어야 한다.

인력을 대폭 충원해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폭 줄이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도 좀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쟁과 차별, 억압으로 얼룩진 교육은 교육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종속된 결과다. 일그러진 학교 시스템의 진정한 변화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

이현주

▶ 16면에서 이어짐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법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가 규정된 것은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을 위해 싸우다 1974년 강제추방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한국 이민법》, 차용호, 2015)

1954년 한국에 처음 온 이래 산업선교 활동을 하며 노동운동을 돕던 오글 목사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맨 먼저 폭로했다. 이 일로 그는 서슬 퍼런 유신체제하의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20시간 동안 조사받는 곤욕을 치른다.

이런 사실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돼 파장이 커지자 박정희 정권은 오글 목사를 강제추방했고, 197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외국인의 정치 활동 금지가 애초부터 반민주적이고,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고, 국제 연대를 가로막기 위한 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독재 정권들이 무너졌어도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은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초기 지도부를 거듭 표적단속으로 추방해 2000년

대 대안세계화운동의 일각을 약화시키려 했다. 추방의 직접적인 근거는 미등록체류였지만, 정부는 그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적극가담”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이나 집회 참가, 서명 운동 등에 참가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임준형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을 진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해당 유학생들에게 '한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법 준수' 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도 상당수 대학들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이 정치 활동을 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학사지침을 두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선거권·피선거권, 공무원임권, 정

당 활동,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활동이 일반적으로 정치 활동에 포함된다.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활동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이고 정치적 기본권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이주민은 251만 명이다. 이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데도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 이중잣대

게다가 명백한 이중잣대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팔레스타인인 학살과 점령을 정당화하려고 프로파간다를 적극 퍼뜨리고 있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시작되자마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혐오라고 비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대사까지 불러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 했다.(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측이 신속하게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자 취소했다.)

또, 이스라엘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불바다' 영상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급하게 비공개로 돌리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대사관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데, 왜 아랍계 이주민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는가?

게다가 출입국관리법에는 금지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주민의 정치적 주장과 활동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만 탄압받는 효과를 낼 것이다.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는 또한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나 국적이나 민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편들고 아랍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서방과 아랍 나라들의 보통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행동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각국 정부의 대립은 민족주의 사상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아 피란한 난민의 경우,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

동에 참가하고 있는 난민들은 쫓겨나기 전에 자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난민이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을 억압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주민·난민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늘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더 큰 규모로 조직화되고 운동에 나서는 것을 우려해, 미리 억누를 준비를 해 놓는 것이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이주민들을 사찰·감시하는 것은 그 일환이다.

이는 한국인들과 그들의 국제 연대를 억누르는 것이자 한국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일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말한다: 이주민·난민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이주민들의 자체 활동을 고무하고, 이주민·난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성장시키고, 한국인들이 이런 운동에 더 많이 참가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의도를 좌절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15면으로 이어짐